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정 성 호*

지난 30년 동안 출산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5 혹은 그 이하의 출산력 수준을 보이는 국가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의 확산과 함께 합계출산율 1.3 이하를 의미하는 초저출산 현상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저출산이 멈출 것인지, 출산율이 회복될 것인지 혹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쉽게 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업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저출산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 글은 저출산 및 초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저출산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은 제2차 인구변천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위험이론, 양성평등 이론, 선호이론, 젠더와 시장이론 등을 포함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들의 특성과 시사점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핵심단어: 출산력, 합계출산율, 저출산, 초저출산, 이론적 틀

I. 대체출산에서 저출산으로

지난 30년 동안 출산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5 혹은 그 이하의 출산력 수준을 보이는 국가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저출산이 멈출 것인지, 출산율이 회복될 것인지 혹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쉽게 답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최근의 연구에서 Lutz(2006)는 장래에 출산율이 증가할 것인지 혹은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

*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shc@kangwon.ac.kr

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업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저출산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저출산의 확산과 함께 합계출산율 1.3 이하를 의미하는 초저출산 현상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초저출산은 남부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났으며, 1999년의 출산력 수준을 기준으로 총 14개 국가가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었다(표 1 참조). 이들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3개 남부 유럽 국가,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 4개 중동부 유럽 국가, 소비에트 연방에 속했던 7개 국가(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초저출산 국가에 도달한 국가는 스페인(1992)과 이탈리아(1993)였다. 이어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라

<표 1> 저출산 국가의 출산력 수준 1985~2005

| 국 가 | 합계출산율 | | | | 합계출산율 하락연도 | |
|-------|-------|------|------|-----------|------------|-------|
| | 1985 | 1990 | 1999 | 2000-2005 | < 2 | < 1.3 |
| 그리스 | 1.67 | 1.39 | 1.30 | 1.28 | 1983 | 1998 |
| 이탈리아 | 1.42 | 1.33 | 1.19 | 1.29 | 1977 | 1993 |
| 스 페 인 | 1.64 | 1.36 | 1.20 | 1.29 | 1982 | 1992 |
| 불가리아 | 1.98 | 1.82 | 1.23 | 1.26 | 1985 | 1995 |
| 체 코 | 1.96 | 1.90 | 1.13 | 1.24 | 1982 | 1996 |
| 에스토니아 | 2.12 | 2.04 | 1.24 | 1.39 | 1991 | 1997 |
| 헝 가 리 | 1.85 | 1.87 | 1.29 | 1.30 | 1980 | 1999 |
| 라트비아 | 2.09 | 2.01 | 1.16 | 1.25 | 1991 | 1995 |
| 루마니아 | 2.32 | 1.84 | 1.30 | 1.29 | 1990 | 1999 |
| 슬로베니아 | 1.71 | 1.46 | 1.21 | 1.23 | 1981 | 1995 |
| 아르메니아 | 6.55 | 2.63 | 1.20 | 1.35 | 1993 | 1999 |
| 벨라루스 | 20.7 | 1.91 | 1.29 | 1.24 | 1990 | 1997 |
| 그루지아 | 2.26 | 2.20 | 1.07 | 1.48 | 1992 | 1997 |
| 러 시 아 | 2.05 | 1.90 | 1.17 | 1.30 | 1990 | 1996 |
| 우크라이나 | 2.05 | 1.89 | 1.19 | 1.15 | 1989 | 1997 |
| 크로아티아 | 1.81 | 1.67 | 1.38 | 1.35 | 1968 | |
| 리투아니아 | 2.08 | 2.02 | 1.35 | 1.28 | 1991 | |
| 폴 란 드 | 2.32 | 2.05 | 1.37 | 1.25 | 1992 | |
| 슬로바키아 | 2.26 | 2.09 | 1.33 | 1.22 | 1992 | |
| 오스트리아 | 1.47 | 1.45 | 1.32 | 1.38 | 1973 | |
| 독 일 | 1.37 | 1.45 | 1.36 | 1.35 | 1971 | |
| 일 본 | 1.76 | 1.54 | 1.38 | 1.29 | 1975 | |
| 한 국 | 1.67 | 1.59 | 1.42 | 1.24 | 1984 | |

자료 : Kohler et al. (2001), UN(2006)

트비아 등이 1995년, 나머지 국가들은 1999년 이르러 초저출산 국가의 대열에 합류했다.¹⁾ 초저출산 현상은 유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홍콩, 일본, 한국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초저출산 추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초저출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혹은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인가 하는 질문이다. 둘째, 현재의 초저출산은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는지 혹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셋째, 초저출산 현상은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지 혹은 남부 및 동부 유럽과 같은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넷째, 초저출산 국가에서 출산연기가 한계에 이르렀는지 혹은 이러한 추세가 가까운 장래에 멈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쉽지 않지만 이 질문들과 연계된 이슈들은 장래의 인구학적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Kohler(2001)는 초저출산은 머지않아 사라질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²⁾ 특히 중남부 유럽의 경우 상당기간 동안 합계출산율 1.3 이하의 출산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초저출산 현상은 현재 합계출산율이 1.3에서 1.5 사이에 있는 다른 지역의 국가들까지 가까운 장래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들의 후보로는 오스트리아, 독일, 여러 중부 및 동부유럽 국가들 (폴란드,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등)과 아시아의 한국 및 일본을 들 수 있다.

한국과 일본 및 유럽 국가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및 초저출산 현상은 출산력이 대체수준에 이르러 안정적인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종래의 인구학적 전망과 큰 차이를 보인다. 사실 출산력에 대한 미래 예측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큰 변화를 보였다. 예를 들어 1998년 UN은 모든 국가가 합계출산율 2.1로 수렴할 것이라는 종래의 가정을 포기하고 이후 수정하여 1.85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 전망 역시 출산력 감소에 따른 저출산이 확산됨에 따라 새롭게 수정되어야 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저출산 문제는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고, 출

-
- 1) 나머지 동유럽 및 발칸 국가들도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력을 보여 조만간에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폴란드(1.37), 리투아니아(1.35), 슬로바키아(1.33), 크로아티아(1.38) 등과 함께 전통적으로 낮은 출산력 수준을 보였던 독일(1.36), 오스트리아(1.32) 등이 있다.
 - 2) 유럽의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출산연령과 출산의도 등에 관한 검토를 통해 Kohler는 출산연기가 가까운 미래에 멈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평균연령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장래의 출산 수준은 출산연기가 지속됨에 따라 대체출산 이하의 출산 수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산력 제고는 가장 긴박한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83년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선진산업국의 저출산 단계에 진입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2008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출생이수는 46만 6천 명으로 2007년 49만 3천 명보다 2만 7천명이 감소하였으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1.25명에서 1.19명으로 2007년에 비해 0.06명이 감소하였다.

한편 저출산 및 초저출산과 같은 출산력 변천의 새로운 양상들은 인구학 분야에 새로운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가져왔다. 저출산 문제에 초점을 둔 McDonald(2005)는 저출산 국가를 합계출산율 1.5 이상에 도달한 그룹과 1.5 이하로 떨어진 그룹으로 나누고, 일단 합계출산율이 1.3 혹은 1.4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1.6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1.6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가설을 내 놓기도 했다. 이 가설에 기초하여 정부는 출산력 수준을 1.6 이상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현재의 저출산 국가들이 미래에 출산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지속적으로 출산력이 떨어질 것인지를 밝혀줄 이론이 부재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Lutz((2006)의 ‘저출산 올가미 가설(The Low Fertility Trap Hypothesis)’은 저출산 국가에서 정부가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혹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2차 인구변천(SDT: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에 관한 논의도 저출산 및 초저출산 추이를 설명하려고 시도로 볼 수 있다.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는 주로 혼인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강조한다(McDonald, 2000; Van de Kaa, 2004). 인구변천의 광범위한 특성 때문에 서로 상이한 사회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구변천의 타당성과 확산을 검토하는 경험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인구변천을 이론적으로 정교화 하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글은 저출산 및 초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저출산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은 제2차 인구변천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위험이론, 양성평등 이론, 선호이론, 젠더와 시장이론 등을 포함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³⁾

3) 이 논의는 저출산에 관해 이론적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McDonald(2001)의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하며, 이 외에도 저출산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참고하였다.

II.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거대이론에서 중범위이론으로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은 인구가 높은 사망력과 높은 출산력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영(0)인구성장의 균형상태) 낮은 수준의 사망력과 출산력으로의 새로운 균형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 사회는 그러한 인구변천 과정을 1870-1930 사이에 경험하였다. 이러한 인구변천 과정은 인구변천이론이라는 이론적 틀로 체계화되었고, 이에 따른 경험적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인구변천은 인류역사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나타난 상황을 그린 것이지만 낮은 사망력과 낮은 출산력으로의 인구변천 추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인구변천이론은 거대이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인구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Thompson(1929)은 18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유럽에서의 출산력 감소가 근대사회의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설명은 이후 Notestein(1945, 1953)에 의해 인구변천이론으로 체계화되었다. 1953년에 출판된 Notestein의 논문은 교육과 합리적 사고의 발전, 자녀에 관한 경제적인 혜택과 비용, 자녀 양육과 양립하기 어려운 여성의 새로운 역할 등장 등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후 인구변천이론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인구변천이론은 1960년대에 이르러 개발도상국들의 높은 인구성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다. 만약 인구변천에 관한 보편적인 설명이 정립된다면 그 양상은 높은 출산력을 보이는 사회에서 잘 드러날 것이라는 견해는 좋은 예이다. 이러한 생각은 인구변천이론을 경험적으로 적용하려는 다양한 연구를 이끌었으며, 유럽출산력연구 (European Fertility Project)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 연구는 유럽의 출산력이 자연출산력(natural fertility)에서 출산력이 통제되는 변화에 주목하였으며, 출산력 수준이 약 10% 정도 이상 감소하는 시기의 유럽 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조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과정에서 출산력 감소가 유럽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흥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보편적인 이론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인구변천이론을 경험적으로 비교적 완벽하게 진행했지만 다른 거대이론과 마찬가지로 경험적 검증을 진행하는데 탄력적이지 못했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는 인구변천이론의 경험적 검증이 변천의 진행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고 주로 변천의 시작을 이끄는 상황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과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모든 상황에 맞는 보편적인 인구변천을 기술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사실상 출산력 감소의 시작을 경험하는 사회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상황을 나타내고자 하는 연구는 출산력 감소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사회의 경제, 문화, 사회정치적 구조, 보건 상태 등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에서 결실을 맺기 힘들다. 물론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황을 밝히는 단일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믿을 필요도 없다. 위에서 언급한 유럽의 출산력 연구 역시 출산력 변천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나타난 유럽 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차이점을 언급하였다.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출산력이 감소됨에 따라 인구변천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거대이론을 추구하는 것은 환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유럽의 출산력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나타난 인구감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이론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인구변천이 완료되는 시점에 출산력 감소가 어떻게 멈출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붐이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게 되자 인구변천이론은 더 이상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1970년대 유럽 국가들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인구감소가 계속되자 인구변천이론은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인구변천이론에 대한 관심은 출산력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낮아졌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출산력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출산력 수준이 적절한 대체수준인지 혹은 장기적으로 균형 상태에 이를 것인지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인구변천의 종착역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며, 더 나아가 출산력은 많은 지역에서 기존의 인구변천이론이 예측했던 전망치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예견하지 못했던 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에 대해 McDonald(2001)는 Merton의 중범위 이론들(middle-range theories)에 주목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는 저출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출산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여러 중범위 이론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들은 나름대로의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 적용은 출산력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및 제도적 상황과 연관되어 고려될 필요가 있다.⁴⁾

지금까지 저출산 및 초저출산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은 크게 보아 구조적 접근과 문화적 혹은 사회학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 접근은 경제

4) 예를 들어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국가의 출산억제 정책이 출산력 감소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유럽에서의 상황과 크게 다르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국가는 출산력 감소를 염려하여 출산촉진정책(pronatalism)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의 정책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이론적 검토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적인 요인들 (여성 교육 및 노동력 증가, 정책 변화, 일반적인 경제적 상태뿐만 아니라 실제 및 예상된 실업에 대한 반응 등)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문화적 접근은 가치관 및 태도의 변화, 여성의 자율성 및 독립성 증대 등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접근들은 각기 출산력이 왜 변화 하는가에 주목하면서 오늘날 유럽과 동아시아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및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나름대로 기여해 왔다. 물론 이들은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이론적 틀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대신 서로 다른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맥락에서 선별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론적 틀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저출산에 대한 설명은 서로 다른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1.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합리적 선택이론은 사람들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비용을 능가할 것인가를 계산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만약 출산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크다면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이른바 효용의 극대화에 주목한다. 따라서 출산력 감소는 아이에 대한 상대적 가격이 높아지는데 반해 부부의 소득은 감소하거나 혹은 아이와 다른 재화 사이의 효용함수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한 설명은 아이의 가격 혹은 비용에서의 변화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19세기 유럽의 경우 아이의 비용은 의무교육의 시작과 함께 증가했다(Caldwell, 1981). 이와 함께 아이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이는 다시 아이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이와 관련된 비용은 시장이 부모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이 보다 경쟁적으로 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해왔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보다 많이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부모들은 아이들로부터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인 비용은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는데 적절한 주택을 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도시의 경우 주택 가격은 매우 높고 값싼 주택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이를 가짐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적인 비용 혹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일과 육아를 결합하는 실행가능성에 달려있다. 아이를 갖게 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아이에 대한 간접비용은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여성의 경

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간접비용은 낮아진다(Chapman, 1999). 다른 한편 잠재적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간접비용은 증가한다. 첫 번째 아이의 출산을 연기하면 여성은 교육, 직업능력, 경험 등을 통해 자신의 잠재적인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아이를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저출산 현상의 맥락에서 Coleman은 아이에 드는 비용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혜택을 내재적인 가치(immanent values)라고 일컬었다. 즉 사람들은 아이를 하나 더 갖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심리적인 효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아이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효용함수가 다른 재화를 좋아하게 되면 다음 자녀를 갖지 않게 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첫 번째 아이가 연기되면 아이 이외의 재화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만약 우리가 출산을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기 원한다면 아이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부모의 수입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다른 재화보다 아이들에 대한 효용함수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마지막 사항은 실제 정책에 쉽게 반영되기 힘들다. 아이를 좋아하는 사회 혹은 아이와 친근한 사회를 표방하는 일반적인 구호가 아이의 효용을 높이는데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아이들이 좋은 관계, 좋은 시간 등을 갖는데 위협이 되는 것과 같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거나 사회제도가 아이를 갖는 가능성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효용은 낮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효용함수가 아이들을 향해 움직이게 한다. 이러한 예는 미국의 예에서 잘 드러난다. 즉 다른 산업국가와 달리 미국의 출산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첫 번째 아이를 비교적 일찍 갖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되어 있다 (Lesthaeghe, 1995).⁵⁾ 이러한 반대로 상대적으로 일찍 출산하는 경우에도 대체수준의 출산력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예가 동유럽과 중부유럽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는 첫 번째 출산이 매우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낮은 출산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다른 차원을 추가시킨 위험이론(risk theory)도 저출산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합리적 선택이론은 사람들이 다음번 아이를

5)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싱가포르는 28세 이전에 첫 번째 아이를 갖는 여성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세 금환급을 해주는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

갖게 됨으로써 생기는 비용과 혜택을 잘 알거나 이해한다는 가정을 품고 있다. 이에 비해 위험이론은 비용과 혜택이 주로 미래의 비용과 혜택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비용과 혜택이 어떤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장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결정은 미래에 무엇을 원하는바에 달려있다(McDonald 1996). 만약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면 의사결정자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다 안전한 방향으로 혹은 그들이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위험사회」의 저자 Beck(1999)은 우리가 위험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호황기와 쇠퇴기가 번갈아 오며 따라 직장은 평생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고용되기 위해서는 지리적 이동도 감수해야 한다. 이자율의 변동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르내리고, 주택 가격 역시 변동이 심한데 반해 우리의 미래는 매우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위험이론은 아이를 갖게 됨으로써 갖게 되는 불안전성 (일정 기간 동안 낮은 소득, 일터로의 복귀에 대한 불확실성, 높은 소비지출, 피부양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 등)에 대한 투자보다는 경제적 안전성 (교육, 노동력에 연계, 장시간 노동, 저축 등)에 대한 투자를 암시한다.

위험에 대한 우려는 사회적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적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아이는 부모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아이는 부모가 많은 걱정을 하게 만드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아이들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홀로 남겨지는 위험도 있다. 아이와 친화적이지 못한 사회적 추세가 계속되는 위험도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 하는 가족을 지지하는 추세가 약화되는 위험이 있다. 이 모든 위험들은 아이 수를 제한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2. 탈물질주의적 가치 이론 (post-materialist values theory)

앞에서 논의한 합리적 선택이론과 관련시켜 보면 가치관이 변화는 아이로부터 다른 재화로의 효용함수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화적인 의미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탈물질주의적 가치 이론은 제2차 인구변천이론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이론은 사회인구학적 행위의 변화는 개인의 자아실현, 개인적 선호에 대한 만족감, 전통적인 권위로부터의 자유 등의 신장에 의해 촉진된다는 점 등을 구체화한다. 탈물질주의적 가치는 이혼율의 증가, 동거의 증가, 혼외 출산의 증가 등과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가치체계의 변화는 근본주의자 혹은 실용주의자, 보수적 혹은 진보적, 물질주의(materialism) 혹은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 중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로 분류한 Inglehart의 논의는 제2차 인구변천 혹은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즉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의 변화는 기성사회에 반발하고 개인과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자아발전과 자아성취의 생각이 강하다는 점에서 제2차 인구변천의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Inglehart의 논의는 탈근대주의 출산력 선호성(postmodern fertility preferences)과 연관될 수 있다. 여기서 탈근대성은 가치지향을 의미하는 세계관과 새로운 시대, 즉 탈근대성의 시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시대정신을 모두 포함한다. 탈근대성의 시기는 근대성의 시기 다음에 이어지는 시기로 경제적 안정성, 매우 높은 생활수준, 그리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리더를 선출하는 기회의 보장 등을 특징으로 한다. Inglehart가 주장하듯이 탈근대주의와 함께 새로운 세계관은 산업혁명 이후 산업사회를 지배했던 세계관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정치, 산업, 종교, 가족, 그리고 성적 행위 등을 지배해왔던 기본적인 규범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는 Lesthaeghe와 Van de Kaa가 주장하는 제2차 인구변천의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탈근대주의의 본질적인 차원을 구성하는 가치체계의 변화는 제2차 인구변천을 설명하는 중요한 준거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탈근대주의를 인구학적으로 개념화하거나 혹은 조작적 정의를 통한 정확히 측정하는 연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탈근대주의는 탈물질주의적 학습 혹은 지향, 자아실현, 개인자유, 가치화, 정신적 안정,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개인적 관계 등을 지향하고 중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Van de Kaa는 탈근대주의의 다양한 특성들과 인구학적 변수들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탈근대주의 수준과 피임 사용, 동거비율 등의 관계를 밝히면서, 탈근대 시대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개인의 전문적인 활동과 학업 등에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탈근대주의는 임신 평균연령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탈근대주의가 출산력과 반드시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탈근대주의적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되는 일은 자아실현을 충족시키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이 제2차 인구변천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부가 자녀를 갖고

양육하는 일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인식할 때 그리고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고 키우는 일이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할 것이라고 느낄 때에만 출산력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확산과 이에 따른 출산력 감소 현상은 전통적인 가족문화가 남아있는 남부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보다 북유럽과 영어권 국가들에서 보다 잘 나타난다. 그러나 Coleman (1998)이 주장하듯이 선진국들 중에서 출산력은 전통적인 사회보다 자유주의적인 사회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비슷하게 호주의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호주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혼율, 동거 및 혼외 출산을 보이지만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예도 있다.⁶⁾

한편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저출산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고전적인 '생태학적 오류'의 한 예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McDonald, 2001). 즉 어느 사회에서든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 덜 종교적인 여성,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 보다 자유주의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지닌 여성은 덜 교육받고, 종교적이고, 농촌에 거주하며, 보수적인 여성보다 낮은 출산력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다시 보다 자유주의적인 사회가 보수적인 사회보다 낮은 출산력을 보인다는 그릇된 결론을 이끄는 데 사용되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예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저출산이 사회제도와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저출산을 가져오는 사회제도의 역할을 나타내는 논의는 앞에서 검토한 합리적 선택이론과 위험이론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며, 저출산을 가져오는 사회제도의 구조에 대한 강조는 다음 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3. 젠더, 가족, 시장 그리고 국가

젠더, 가족, 시장, 국가 등과 같은 제도들의 변화는 왜 출산력이 변화하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이러한 제도들은 출산 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회, 제한, 위험 및 수요 등의 근원을 이룬다. 사실상 출산력 변천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 제도들이 사회마다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독특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서유럽의 경우 출산력은 남성이 집안의 별이를 맡아서 하는 가족 형태가 시장과 국가 제도에 기초를 이루면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시기에 감소했다. 많은 경우 국가의 임금 정책은 최저생활임금에 기초를 두었으며,

6) 다음에 거론할 양성평등 이론은 왜 전통적인 가족체계를 지니고 있는 사회가 매우 낮은 출산력을 보이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틀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임금은 일하는 남성과 아내 및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충분했다. 그러나 남성이 집안의 별이를 맡아서 하는 가족 형태는 1960년대부터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는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가족을 가지거나 그 이상의 관계를 지닌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노동자들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했다. 시장에서 노동자들은 단지 기술을 가진 개인들에 불과했으며, 국가 역시 가족보다는 개인들에 대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노동자들은 시장의 자유로운 운영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제제도이며, 이기심(self-interest)이 사회에 가장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신자유주의적인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규제와 제한은 사업의 효율성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축소되었다.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제도의 특성은 작은 정부와 낮은 세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자유무역, 임금과 작업 환경을 결정하기 위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위한 자유,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의 삭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개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기술을 가장 높은 입찰가를 부르는 고용주에게 팔 수 있는 자유를 지니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체계를 활발하게 하거나 규제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 결과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의 가족 사정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으며, 따라서 노동자의 가족에 대한 책임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자유시장체제는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더 나은 번영을 가져온 것으로 주장되었다. 그러나 분배적인 측면에서는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새로운 시장경제는 이 경제체제에서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보상을 주는 한편 낙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그들의 소득원을 상실함으로써 혹은 그들의 경력이 뒤처짐에 따라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위험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보상의 수준은 이전의 체제보다 훨씬 클 수 있으나 위험 역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시장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삶은 보다 많은 상금이 걸려있는 도박과 같이 변화하게 되었다.

시장주의적 접근은 개인들을 생산체계에 대한 투입으로 취급한다. 결과적으로 개인들은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에 대한 그들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야만 한다. 이는 그들이 팔 수 있는 기술, 일의 경험 및 시장성이 높은 평판 등을 습득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반응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생산에 이익을 주는 게임을 치루는 선수에게 사회적 재생산

(social reproduction)에 시간과 돈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인다. 여기서 사회적 재생산이란 이타주의 즉 다른 사람들 혹은 사회전체를 위해 바치는 시간과 돈을 포함한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타주의는 무모한 용기와 다르지 않다.

가족은 사회적 재생산의 핵심이며, 이타주의가 가득한 곳이기도 하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 정치인들도 시장경제라는 공적인 세계와 가족이라는 사적인 세계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다. 즉 개인은 시장에서 매우 경쟁적일 수 있으며, 개인주의적이고 위험을 싫어한다. 이에 반해 가족 내에서는 자기희생을 기꺼이 할 수 있으며, 이타주의적이고 위험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논리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시장에서의 생산 활동은 남성의 책임이며 사회적 재생산은 여성의 책임이라고 믿으며, 남성이 집안의 별이를 맡아서 한다는 생각, 즉 가족의 삶은 남성이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남성이 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젊은 여성들은 시장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겨루고 있으며 고용주들도 여성을 고용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인적자본이라는 점에서 시장은 숙달되지 못한 남성보다는 숙달된 여성을 고용하려 한다. 오늘날 위험을 싫어하는 여성들은 이혼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남성에게 의존하여 계속 살아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와 학교는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는 기술을 쌓을 것을 주문하고 격려한다. 이 결과 오늘날 젊은 여성들이 그들의 미래의 삶을 남편에서 찾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결혼 후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거의 없다.

오늘날 자유시장경제가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성이 별이를 책임지는 형태의 가족 형태를 부활시킬 수는 없다. 시장은 특성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할 것이며, 노동시장과 연관된 젠더 구조는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 현재의 자유시장경제 구조에서 이러한 여성의 상황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장은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 즉 아이들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McDonald는 지속가능한 출산력 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장이 양성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가족 모델의 정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양성평등이론 (gender equity theory)

양성평등이론은 출산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의 하나로 양성평등의 수준이 출산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저출산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주목받아 왔다. 선진 산업사회에서의 사회제도들은 최근까지 남성이 벌이를 책임지고 여성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맡는 성별 역할 분담이 뚜렷하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어왔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남성과 여성이 선천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성은 가족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여성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래로 여성은 교육 및 노동 현장에서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이 결과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의 정도가 상당한 높아졌다.

양성평등이론에 따르면 선진산업사회에서 출산력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상이한 사회제도에 적용되는 양성평등의 수준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우 낮은 출산력 수준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교육 및 고용의 측면에서의 양성평등 수준이 매우 높은 반면 가족서비스, 세금체계, 사회보장 등과 같은 가족의 구성원과 연계된 제도에서의 양성평등 수준이 낮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 교육과 고용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누리지만 이러한 기회들이 아이를 가짐으로써 박탈당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을 꺼리게 되며, 장기적으로 출산력 수준은 믿을 수 없을 정도까지 낮아진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 산업사회에서 개인지향적인 제도들(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s)은 괄목할만한 정도로 향상되었으나 남성 중심의 사고는 여전히 가족지향적인 제도들(family-oriented institutions)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체계의 측면에서 보다 전통적인 사회일수록 사회제도간의 불일치 수준은 더 높으며, 출산력은 더욱 낮아진다는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 수준을 보이는 지역이 남부 유럽과 전통적이고 남성 중심의 가족체계를 지닌 사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경험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 이론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족 체계에서 남성 중심의 모델을 변화시키는 제도적인 개혁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5. 선호이론 (preference theory)

최근 저출산 및 초저출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선호이론(preference theory)은 문화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이론적 틀로서 “일 혹은 가족”에서 어느 쪽을 선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선호이론은 Hakim(2000)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라이프스타일 선호의 이질성이 가족과 출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학적인 이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두 개의 라이프스타일 형태 즉, 출산과 취업에 대해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변화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선호이론은 라이프스타일 선호와 가치관이 여성의 출산 선택 및 출산 결과를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본다. 이는 최근 가족 및 출산력에서의 변화 배경에는 문화적인 요인들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선호는 물론 남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여성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그 이상이다. 취업인가 혹은 가정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기 때문이다.

Hakim에 따르면 현대 산업사회에서 여성은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 가정 혹은 일 중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가족 지향적(family oriented) 여성은 가족생활과 자녀들을 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일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인다. 둘째, 일 지향적(career oriented) 여성은 인생에서 공공 부문 이든 사적 영역이든 일하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둔다. 이러한 여성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 원하며 종종 미혼으로 남거나 무자녀 가정을 이룬다. 셋째, 적응적 여성(adaptive women)은 어느 쪽이든 특별한 선호가 없는 경우이다. 이들은 가능하면 두 형태 즉, 가정과 일을 모두 갖기 원한다. 이 여성들은 가정과 일의 중요성에 따라 나름대로의 길을 모색한다. 이 그룹에 속하는 여성들은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 일을 그만두거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갖는 경우가 많다.

선호이론에 따르면 이 세 가지 라이프스타일은 다섯 개의 역사적 변화 (피임 혁명, 동등한 기회의 혁명, 화이트칼라 직종의 확산, 2차 소득원으로서의 직장 출현, 개인적 가치관의 강조 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에 기초를 두고 있다. 새로운 상황의 전개는 제2차 인구변천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Hakim은 현대사회가 모두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세 개의 그룹 비중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회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선호이론에 대한 비판은 인과성에 관한 것이다. 즉 이질적 선호도가 실제로 이질적인 태도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것이다. 비판자들은 선호가 행위에 인과적

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특별한 상황과 배경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서의 지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결국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Crompton and Harris 1998). 실제의 출산력이 가치관과 선호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 지향적인 여성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자녀 갖기를 원한다. 엄마가 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여성들에게 뿌리를 제공해주며 가족 지향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갖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선호이론은 상황적, 구조적 및 규범적 제약 등이 여성의 선택을 한 쪽으로 치우치게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주목할 만 하다. 이와 비슷하게 Tomlinson(2006)은 돌봄 네트워크, 일의 위상, 복지 정책 등 세 가지 변수가 여성의 일에 대한 선호와 자녀를 가졌을 때 시간제로 일을 할 것인지 전일제로 일을 할 것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개인적, 재정적 및 가족의 제한 등이 여성의 일에 대한 지향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Doorewaard(2004)의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의 선호성이 실제의 출산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높을 수도 있다.⁷⁾

이러한 비판에 대해 Hakim은 선호이론은 상황적, 구조적 요인들의 영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호도가 고용율, 고용시간, 출산력, 결혼 및 이혼 형태 등의 행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사회 구조적, 제도적 요인들은 서로 상이한 그룹의 여성들에게 서로 다른 방법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적응적 여성들은 공공의 정책 및 제도적 요인들에 민감한 데 반해 다른 두 그룹은 그들의 내부에 자리 잡은 선호성에 연관된 요인들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가족 지향적인 여성들은 고용 정책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일 지향적 여성들은 가족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III. 한국의 저출산 연구와 이론적 논의

앞에서 논의한 다양한 이론적 틀은 이미 저출산 및 초저출산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인구학적 변화를 밝히는데 중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이 지역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7) 예컨대 일 지향적 선호는 출산력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아마도 생애 과정에서 라이프스타일의 선호를 밝히기 위한 종단적인 자료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론적 틀은 개별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한국 사회의 저출산 및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인구변천 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급격한 출산력 감소이다. 한국은 1983년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선진국 수준의 저출산 단계에 진입하였고,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8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 수준인 1.19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전년에 비해 3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출생이수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20대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⁸⁾ 출산 순위별로는 첫째아의 감소가 출생 감소의 74.1%를 차지하였으며, 둘째아 이상은 25.9%를 차지하였다. 출생아 수 감소와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예컨대 가임 여성인구 특히 주출산층(20~39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젊은층이 결혼, 임신 및 출산을 지연하고 있으며, 만혼화로 인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한국의 저출산 및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는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관심을 끈 시점이 2000년대 초반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적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아마도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관련 변수들의 측정이 곤란하다는 점과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적 틀을 한국 사회에 적용시키는데 따른 문제점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다룬 많은 연구들이 이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나 특정 이론의 틀을 활용하여 측정 가능한 변수와 출산력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출산력이 대체수준 이하로 저하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2차 출산력변천의 개념을 도입한 김두섭(2005)의 연구는 주목할 만 하다. 그는 제2차 출산력 변천에서는 제1차 출산력 변천과 달리 사망력의 저하와 인구이동의 영향이 축소된 반면 가치관과 태도의 역할이 크게 강조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이 한국의 급격한 출산력 저하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1980년 대 중반 이후의 출산력 저하는 경기 후퇴에 따른 불안정한 노동시장, 가족형성의 지연과 약화,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등의 요인으로 설명

8) 20대의 경우 262천 명에서 242천 명으로 20천 명이 감소하여 전체 감소분의 81.5%를 차지하였으며, 30대의 경우는 264천 명에서 259천 명으로 5천 명이 감소하여 전체 감소분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

하고 있다. 첫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경기불황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혼인과 첫 출산의 시기를 연기하거나 자녀 간 출산 터울을 넓히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한국이 최근 초저출산 수준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불황과 높은 실업률이 출산력 저하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연구결과에서 잘 드러난다.⁹⁾ 둘째, 가족형성의 지연과 약화는 결혼의 지연, 유배유자 비율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 등을 의미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는 결혼과 첫 출산 시기의 지연으로 나타난다. 유배유자 비율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는 자기중심적 삶을 지향하는 젊은이들의 가치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출산력 저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 전통적 권위로부터의 자유, 개인적 취향의 충족과 같은 가치관이나 태도에 의해서 출산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¹⁰⁾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저출산에 대한 설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교육과 고용 분야에서 여성차별의 감소와 자녀양육에 대한 여권 확대는 한국의 출산력 저하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¹¹⁾

앞의 논의를 기초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 유삼현(2006)의 연구도 한국의 제2차 출산력 변천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지역별 차별출산력을 분석하고 있는 이 연구 역시 양성평등의 관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가족형성 등을 저출산 인과구조의 결정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과 출산력을 낮추는 부(-)적 관계를, 가족형성은 출산력을 높이는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을 매개로 출산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력 저하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두 연구는 모두 한국 사회의 저출산 구조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가족형성의 지연과 약화,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등을 제시하고

9) 경제위기와 저출산 문제는 이성용(2006)과 김두섭(2007)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10) 이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장래인구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초점을 청년인구가 빨리 결혼하고 출산하도록 유인하는데 우선적으로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안정, 교육제도의 전반적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1) 성 평등성과 둘째 출산과의 관계를 밝힌 박수미(2008)의 연구도 성 평등 의식의 확산이 저출산 현상에서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혼취업 여성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이 연구는 가족내 성 형평성 여부가 둘째 출산 계획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양성 평등의 실현이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저출산을 가져온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중 결혼율의 감소, 초혼 연령의 상승, 이혼율의 상승, 소자녀 가치관 등 가족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앞서 논의한 탈물질주의 가치 이론에 포함된 인구학적 변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러한 변인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유럽 사회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양성평등의 관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 등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을 이해하는데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큰 변인으로 보인다.

물론 이 변수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론적 틀에서 논의될 수는 없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합리적 선택이론, 위험이론, 젠더 및 시장이론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가족형성의 지연과 약화는 탈물질주의적 가치이론과 선호이론에서 그리고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은 양성평등이론과 젠더 및 시장이론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족형성의 지연과 약화는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의 가치관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오늘날 남녀를 불문하고 20대에게 있어 결혼은 더 이상 중요한 개인과업이 아니며, 결혼과 출산 또한 순차적이며 연속적인 생애 과업으로 수용되지 않음은 물론 혼인과 자녀 출산에 있어 사회적인 적령기의 개념조차 퇴색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곧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 평균초혼연령의 지속적인 증가와 미혼인구의 증가라는 집합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김혜영, 2008). 가족형성의 지연은 선호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즉 일 지향적 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결혼을 미루거나 무자녀 가정을 선호하게 되며, 아예 독신으로 남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게 된다.

한편 가족형성의 지연과 약화는 1990년대 후반에 다가온 IMF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확산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와 개인의 이윤추구에 기반 한 개별노동자 모델의 도입을 요구함으로써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을 해체하며, 이는 결국 기성의 가족제도의 약화 혹은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청년세대의 가족구성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환경으로 작용하게 된다(김혜영, 2008).

가족형성의 약화는 양성평등이론으로도 뒷받침 될 수 있다. 최근 젊은이들의 성 평등 의식과 기존의 가족규범 사이의 격차가 커지면서 젊은이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결혼을 통해 구성되는 가족은 더 이상 필수적인 문제도, 매력적인 유인 요소도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성이 노동시장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여성의 의식 수준도 향상되었으나, 가족 내에서는 여성이 여전히 가사 및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갖게 될 때, 여성은 불평등한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적인 삶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도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밝히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예컨대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학적인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거시적으로 분석한 오유진(2008)은 여성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활동 비율이 높아지고 또한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 폭이 줄어드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청년 실업률로 대변할 수 있는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여건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출산 중단 및 포기 등으로 이어져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출산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출산에 따른 임금손실과 기회비용 및 교육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또한 청년층의 고용여건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사회의 저출산력 현상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최근의 출산율 저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곧 종전의 출산율 수준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 증가폭은 매우 제한적이며, 저출산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맞벌이가정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반해 가족 내에서의 양성평등 의식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저출산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출산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위에서 논의한 저출산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가족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결혼의 중요성, 삶에 있어서 자녀의 중요성 등에 관한 가치관이 널리 확산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가족형성 관련 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양성평등의 관념과 노동시장의 안정성의 제고 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두섭 (2005)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과 그 인과구조” 《인구와 사회》 한양대학교 인구 및 고령사회연구소, 1(1): 23-53.
- _____ (2007) 《한국의 경제위기와 출산력 변화》 집문당.
- 김혜영 (2008) “신자유주의와 다양한 가족” 《한국사회》 한국사회연구소, 9(2):55-94.
- 박수미 (2008) “둘째 출산 계획이 결정요인과 가족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31(1):55-74.
- 오유진·박성준 (2008) “저출산의 경제학적 분석” 《한국경제학보》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15(1):93-112.
- 은기수·이윤석 (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8(1):107-132.
- 유삼현 (2006) “지역별 차별출산력의 분석: 저출산 인과구조의 이해” 《인구와 사회》 한양대학교 인구 및 고령사회연구소, 2(2): 53-76.
- 이성용 (2006) “경제위기와 저출산”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29(3): 111-138.
- 정성호 (2009) “산업사회에서의 제2차 인구변천”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32(1)
- Beck, U. *World Risk Society*, Malden Mass: Polity Press.
- Caldwell, J. (1981) “Mass education as a determinant of the timing of fertility declin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6(2).
- Chapman, B., M.G. Dunlop, A. Liu and D. Mitchell (1999) “The forgone earnings from child rearing revisited”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Discussion Paper* No. 407,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4-15 July.
- Crompton, R. and F. Harris (1998) “Explaining women’s employment patterns: ‘orientation to work revisited’”,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9(1): 118-36.
- Doorewaard, H., J. Hendrickx and P. Verschuren (2004) “Work orientations of female returner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8(1): 7-27.
- Inglehart, R.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Coleman, D. (1998) “Reproduction and Survival in an unknown world: what drives today’s industrial populations and to what future?” *NIDI Hofstee*

- Lecture Series*, No. 5, Netherlands Interdisciplinary Demographic Institute, The Hague.
- Hakim, C. (2000) *Work-lifestyle choices in the 21st century: Preference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 Kohler, H-P, F.C. Billari, and J.a. Ortega (2001) "Towards a theory of lowest-low fertility", *Working paper WP 2001-032*, Mas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 Lesthaeghe, R. (1995)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Western countries: An interpretation", In: K.O. Mason and A.M. Jensen (eds.) *Gender and family change in industrialized countries*. Oxford, Clarendon Press, pp. 17-62.
- Lesthaeghe, R. and van de Kaa, D.J. (1986) Two Demographic Transitions? In: D.J. van de Kaa and R. Lesthaeghe (eds.), *Population: Growth and Decline*, pp.9-24. Van Loghum Slaterus.
- Lutz, W., V. Skirbekk, and M.R. Testa (2006) "The low fertility trap hypothesis: Forces that may lead to further postponement and fewer births in Europe", *Interim Repor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 Analysis, IR-06-017.
- _____ (1996) "Demographic life transitions: an alternative theoretical paradigm", *Health Transition Reivew*, Supplement 6: 385-392.
- _____ (2001) "Theory pertaining to low fertility", Paper presented i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Working Group on Low Fertility,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ow Fertility: Trends, Theories and Policies, Tokyo, 21-23 March 2001.
- _____ (2005) "Low fertility in Singapore: Causes, consequences and policies," Paper presented at the *Forum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n East Asia, Beijing*, May 16-17, 2005.
- Notestein F. (1945) "Population - the long view" in T. Schultz(ed.), *Food for the World,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36-57.
- _____ (1953) "Economic problems of population change", 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gricultural Economist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3-31.
- Thompson, W. (1953)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34: 959-975.

Tomlinson, J. (2006) "Women's work-life balance trajectories in the UK: reformulating choice and constraint in transitions through part-time work across the life-course",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34(3):365-382.

United Nations (2006)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6 revision*

[2009. 3. 27 접수 | 2009. 7. 17 채택]